

한국, 일본, 미국의 복지의식 비교연구

— 부산, 오사카, 시카고를 중심으로 —

신섭중* 박병현**

- I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II 복지의식의개념과 미국, 일본, 한국의 복지의식의 배경
- III 조사의 방법과 표본의 특성
- IV 조사결과의 분석
- V 조사결과의 분석에 대한 논의
- VI 맺으면서

I.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최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에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에 맞게 고안되고 또 그 나라의 복지욕구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래서 '한국형 사회복지', '한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한국문화를 반영하는 사회복지'가 한국사회복지학계의 주요 이슈가 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한국형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만 무성했지 한국형 사회복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렵פות한 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한국인의 복지에 대한 의식과 인식의 객관적인 관찰과 분석이라는 과정이 행해지지 않은 채 '한국형 사회복지의 개발'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려는데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복지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을 외국인의 것과 비교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한국형 사회복지'라는 구체적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초자료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일본인과 미국인의 복지의식과 비교하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 이유는 한국과 비슷한 문화와 경제성장과정을 지니고 있는 국가인 일본과, 전혀 이질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는 미국을 한국과 비교하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복지의식은 조사된 적이 있으나¹⁾ 같은 조사표를 사용하여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외국인의 복지의식과 비교연구한 적은 별로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국가간 비교연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日本 大阪市立大學 生活科學部 長壽 社會科學研究室와 공동으로 한국, 일본, 미국 3개국의 복지의식을 같은 조사표로 조사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일본인과 미국인의 복지의식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한국인의 복지의식의 수준을 간접적으로나마 측정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외국인의 것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한국형 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비교사회복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의식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세 국가의 사회복지발달과정이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요 이데올로기를 먼저 살펴볼 것이다. 그 후에 조사결과를 분석 비교하고, 이 결과가 한국형 사회복지정책 방향설정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가간의 비교연구와 설문조사연구가 원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번째의 한계는 조사대상을 한국은 부산시민, 일본은 오사카시민, 미국은 시카고시민으로 한정시켜 조사하였기 때문에 세 국가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것이다. 두번째 한계는 조사표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3개국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세 국가의 조사대상자들이 조사문항의 의미를 동일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번째의 한계는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이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네번째의 한계는 복지의식조사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복지의식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설문문항들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배경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선정된 조사문항이 조사목적인 복지의식을 측정하기에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 미국의 복지의식을 동일한 조사표로 비교한 자료를 제시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

1) 여기에 관한 것으로는 김영모, 한국인의 복지의식, 서울, 일조각, 1980; 한국개발연구원,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 1981; 김상균, 정원오,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25호, 1995, pp.1-33 등이 있다.

II. 복지의식의 개념과 미국, 일본, 한국의 복지의식의 배경

1. 복지의식의 개념

인간의 마음의 내용 (the content of mind)을 일반적으로 의식이라고 할 때, 의식은 마음의 인식작용이라는 과정적 측면과 그러한 인식의 결과로 생기고 축적되는 마음의 인식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식은 인간의 행위와 연결되는 행동성향이라는 의미의 태도라는 개념도 함축한다.²⁾ 마음이 의식하는 것은 항상 어떤 대상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비물질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다. 인간의 복지와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제도, 복지체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태도 혹은 의식을 복지의식이라고 개념규정할 수 있다.³⁾ 이러한 복지의식이라는 개념을 규정할 때는 복지에 대한 인식, 평가, 태도 혹은 행동적 반응성향, 감정과 인상, 신념 및 평가 등의 정신작용의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하고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의 내용은 그 주체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복지, 민간기관이 실시하는 민간복지, 그리고 가정에서 제공되는 가정복지로 나누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조사연구에서는 공공복지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와 세금인상과의 관계,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를 묻는 문항을 선정했으며, 민간복지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관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가족복지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노인부양과 수양부모에 대한 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의 주요대상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 빈민들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의식을 묻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2. 미국, 일본, 한국의 사회복지의식의 배경

1) 미국의 사회복지배경

사회복지는 개인적 이데올로기나 집단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으며 고안되고 시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을 현재까지 이끌어온 개인의 정신이나 집단적인 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개인적 성취와 자립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individualism)이다. 1830년대에 Tocqueville이 미국의 민족정신으로 개인주의를 꼽았듯이 미국의 개인주의정신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였다. 개인주의는 公的인 부문

2) 김경동,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 변화와 경험적 추적, 박영사, 1992, p.487.

3) 김상균, 정원오, 전계논문, p.3.

및 교회나 정부의 권위로부터 개인, 가족, 이웃, 직장 등과 같은 私的인 부문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개인주의 정신이란 이기주의나 반사회적인 탐욕이 아니라 상호존중과 이웃에 대한 관용을 지닌 책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⁴⁾ 두번째 정신은 자유주의사상(liberalism)⁵⁾이다. 자유주의사상은 시대상황에 따라 융성하는 시기도 있었고 쇠퇴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남아 있으면서 미국인들의 빈곤에 대한 인식과 사회복지의 성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체제인 미국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였다. 전통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고전과 경제학과 결탁하여 자유방임주의 경제를 주창하며 정부의 경제 및 사회부분에의 개입에 반대하였다. 또한 자유주의가 매우 융성하였을 때엔 적자생존을 주창하면서 빈곤의 개인책임성을 주장하는 다워니즘과 결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세번째의 정신은 자원주의정신(voluntarism)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원주의정신이 강하였으며 이것은 복지정책의 방향설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말 현재 미국에는 州수준에서 조직된 자원단체가 118만개나 되며 그중 85만개는 자선단체 혹은 사회복지조직으로 알려져 있다.⁶⁾

미국은 전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정신과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지만 사회복지는 이 세가지 정신과 사상의 일시적 浮沈을 겪으면서 성장과 후퇴를 반복하였다. 1929년 경제공황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빈곤의 개인책임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자원주의의 세력이 정점에 달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사회복지는 법제화되지 못했고 발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빈곤의 개인책임성이 거부되고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사상이 일시적으로 쇠퇴하였던 시기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시기가 1930년대의 대공황시기와 1960년대 사회불안시기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시기는 미국의 사회복지가 획

4) 박병현,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제도 발달비교”, 仁昌 愼燮重博士 華甲記念論文集, 1994, pp.102-3.

5) 자유주의는 매우 혼동되기 쉬운 개념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자유주의는 현대에 사용되고 있는 진보적(liberal) 정치이념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실제적으로 전통적인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는 현대의 진보적 정치이념(contemporary liberal political view)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전통적인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제한된 정부를 강조하며 소극적인 사회복지를 추구하는데 반해, 현대의 진보적 정치이념은 집단성과 규제자, 배분자로서의 확대된 정부의 역할과 적극적인 사회복지를 추구한다. 본 논문에서 언급된 자유주의란 전통적인 자유주의를 말한다. 미국의 자유주의의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ndrew W. Dobelstein, Politics, Economics, and Public Welfar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6, pp.88-91을 참조하기 바람.

6) Jenniffer R. Wolch, The Shadow state: Government and Voluntary Sector in Transition, New York, The Foundation Center, 1990, p.47.

기적으로 발전되었던 시기였다. 사실상 미국 복지국가의 전개는 대체로 1935년 사회보장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확장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발전하였던 사회복지는 1940-50년대의 경제호황기에 맥을 이어가지 못했으며, 1960년대의 사회불안과 빈곤을 근절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던 ‘War on Poverty’ 정책도 1970년대 중반의 오일쇼크를 기점으로 점차 쇠퇴하였다. 특히 1980년대의 레이건 행정부가 제창한 경제공황 이전에 번창했던 자유주의와 맥을 같이하는 신보수주의의 등장과 함께 미국의 사회복지는 대폭 축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사회복지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원주의의 浮沈과 반비례하면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미국을 이끌어온 세 가지 정신과 사상의 강세는 미국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복지선진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에 비해 사회복지의 발달이 늦은 항상 불완전한 복지국가였던 것과, 사회복지 부문보다는 사회사업방법론 부문이 일찍 발전하였던 이유를 설명하여 준다.

2) 일본의 사회복지배경

일본은 미국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매우 다르지만 몇가지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첫째는 두 국가 모두 경제대국이라는 점이고, 두번째는 두 국가 모두 유럽의 혼합 경제체제의 복지국가에 널리 퍼져있는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본은 비록 복지국가라는 명칭은 붙이기 어려우나 여러가지 삶의 질의 지표를 살펴볼 때에는 일반적인 삶의 질의 수준은 매우 높다. 예를들면 평균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길며 유아사망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과 건강수준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990년 UN이 발표한 일본의 인간발달지수 (Index of Human Development)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⁸⁾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매우 다른 사회문화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특징으로는 국가주의와 가족주의 그리고 엄격한 상하관계를 들 수 있다. 첫째, 일본이 미국과 다른 점은 미국은 권력이 주나 지방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발전해 온데 반해 일본은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항상 국가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의 메이지 시대의 목적은 富國強兵이었으며 이것은 1930년대와 1940년대뿐만 아니라 제2차세계대전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明治의 初年 (1868) 근대국가로서의 출발이래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7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일

7) 이해경, “복지국가의 형성과 전개 - 미국과 일본의 비교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편, 비교사회복지 제2집: 복지국가의 비교, 서울: 을유문화사, 1993, p.86.

8) The Economist, 26, May 1990, p.81.

본의 施政에 있어 일관적으로 추진되어온 근본적 방침은 殖産興業이며 경제우선이었다. 더욱이 이와 같은 殖産興業의 이름 하에 추진되었던 경제우선의 施政은 다시 군사우선으로 탈바꿈하여 강력히 추진됨으로써 70여년에 걸친 일본의 시정의 중심과제는 단적으로 말하자면 부국강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가족의 역할이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리고 엄격한 상하관계로 인한 아랫사람의 윗사람에 대한 충성심과 윗사람의 아랫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기업복지와 같은 일본 특유의 사회복지의 발달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역할의 강조와 기업복지의 발달을 가져온 문화가 결국은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의 지출이 서구유럽복지국가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은 1922년의 건강보험의 제정을 효시로 1945년 패전에 이르는 23년간에 걸쳐 선원보험법, 노동자연금보험법 등의 각종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제정 성립을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근대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전시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戰時立法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여 순수한 국민의 복지를 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유지, 배양을 통한 전력증강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¹⁰⁾

패전 후 10년간 (昭和 20년대) 일본의 사회복지발달의 두드러진 특징은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새로운 제정과 후생연금보험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사회보험부문의 충실을 기할 수 있었으며, 생활보호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공적부조제도의 발전을 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중위생 및 의료제도 등에 걸친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오늘날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다듬었다고 할 수 있다.¹¹⁾

1955년 이후 일본은 경제자립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고도경제성장의 시기로 접어들었으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1950년대 말과 60년대에 일본경제는 연평균 10%의 성장을 계속하여 국민 1인당 GNP도 선진공업국대열에 들어섰다. 당시는 사회보장, 노동조건, 생활수준에 있어서 아직 서구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1970년대에는 이러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보았다. 그러나 1973년의 오일쇼크를 계기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새로운 경제구조와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사회복지방향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금후의 노령화사회에 대응해야 할 사회보장의 존재근거에 관하여’에서 고복지, 고부담론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가책임을

9) 末高信, 安井信夫, 増補, 現代の社會保障, 東京: 成文堂, 1970, p.129.

10) 신섭중, “일본의 사회보장”, 신섭중 외 공저, 세계의 사회보장, 서울: 유평출판사, 1994, p.416.

11) 전개서, p.420.

재검토하고, 개인의 자조능력과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조한 '신경제사회7개년계획'의 일분형 복지사회론, 부담 없는 재정재건을 위한 임시행정조사회회의 '활력 있는 복지사회론'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조류의 공통점은 사회복지의 효율화와 자조노력의 강조와 개인 부담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¹²⁾

3) 한국의 사회복지배경

미국의 사회복지가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원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일본의 사회복지의 국가주의, 가족주의, 엄격한 상하관계의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한국의 사회복지의 권위주의적 국가체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6.25 전쟁 이후의 한국의 사회복지의 전쟁고아를 위한 민간위원과, 현물형 원내구호를 중심으로 하는 지극히 주변적이고 잔여적인 성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물론 이 급여는 생존권 보장이라는 법적인 권리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고, 생산관계의적인 것은 물론, 국민 국가의 통치 수단적인 성격조차도 지니지 못한대, 국제적인 자선의 영역에 머물렀다.¹³⁾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정책이 시작되었다. 현대한국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960년대 초 이후의 놀라운 경제성장이다. 1960년 1인당 GNP가 세계 최하위에 속하는 미화 \$80이던 것이 1996년이 되면 \$10,000을 넘어서게 된다. 이렇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의 하나는 권위주의적 국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사회 하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법의 제정시기와 그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초반에 십여개가 넘는 사회복지관련법들을 제정하였다. 생활보호법(1961),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의료보험법(1963), 공무원연금법(1960), 원호법(1961), 사회보장에 관한 법(1963), 아동복지법(1961), 재해구호법(1962) 등 많은 법들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중에서 실제로 시행을 보게 된 것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생활보호제도 등 수개에 불과하며 제대로 시행을 보게 된 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었다. 그 이유는 정권유지 차원에서 공무원과 군인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¹⁴⁾ 이런 점으로 볼때 당시의 사회복지제도는 군사정권이 필요로 했던 정당성의 창출을 위한 선전적 약속이며 국민통제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그 시행은 뒤로 미루어졌으며, 1976년

12) 足立正樹 編著, 新版 各國の 社會保障, 京都: 法律文化社, 1993, p.185.

13) 이혜경,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국가의 발달: 한국의 경험", 사회복지 국제학술대회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발표논문, 1992년 9월, 서울, pp.375-6.

14) 전계논문, p.378.

에는 1963년에 제정되었던 의료보험법이 전면 개정되고 1977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 이유는 점증하는 소득격차와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저항이 합쳐져서 권위적인 정부는 의무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복지제도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있어 복지제도가 가장 확충되었던 시기는 1980년대이다. 1983년에 의료보험법이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1986년에는 새로운 이름의 국민연금법이 제정되고 198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1987년에는 최저임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이 사회복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국민연금법과 개정된 의료보험법이 모두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제도였고, 최저임금법은 1963년에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함께 노동계급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였기 때문이다.¹⁵⁾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시행도 1987년부터 일기 시작한 노동운동을 회유하기 위한 일종의 노동계급에 대한 복지공세, 즉 통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의 사회복지체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들에 비하면 사회복지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비슷한 경제수준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사회복지의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¹⁶⁾ 또한 최근의 한국 사회복지의 경향은 사회복지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의 긍정적인 측면은 도외시하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보다는 비전문가인 자원봉사자를 강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III. 조사의 방법과 표본의 특성

1. 조사의 방법

조사는 日本 大阪市立大學 生活科學部 長壽 社會科學研究室과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한국에서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조사의 모집단으로 하여, 12개 구별로 각 250명씩 무작위 추출하여 총 3,000명을 조사표본으로 하였다. 일본에서는 大阪市立大

15) 김태성, 성경륜,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 1993, p.293.

16) 예를 들면 우리 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그리스 (92년도 1인당 GNP 7,290\$)의 경우 국민총생산의 9%를 사회복지를 위해 쓰는데 비해 우리 나라는 1% 수준이다.

學 生活科學部 長壽 社會科學研究室에서 大阪市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3,000명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시카고의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NORC)에 의뢰하여 시카고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케하였다.

조사의 방법은 우편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세 나라 모두 1회에 한하여 우편으로 조사표를 보냈으며 추가 재촉은 하지 않았다. 조사시기는 한국은 1995년 3월이었으며, 일본은 1992년 3월, 미국은 1994년 3월이었다. 회수율은 한국은 3,000명중 1,017명이 회답하여 33.9%였고, 일본은 3,000명중 1,372명이 회답하여 45.7%, 미국은 2,000명 중 864명이 회답하여 43.2%였다. 조사들은 일본과 미국은 선거인단 명부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은 선거인단 명부는 선거 이외의 목적으로는 외부유출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명부를 사용하였다. 조사 문항의 내용은 3개국 모두 거의 동일하나 일부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되었다.

2. 조사대상자의 특성

3개국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은 <표 1>에서 <표 3>에 나와 있는 것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성별분포

(%)

나이 \ 국가	한 국	일 본	미 국
	남 자	566 (55.7)	636 (46.4)
여 자	424 (41.7)	700 (51.0)	410 (47.4)
무 응 답	26 (2.6)	36 (2.6)	23 (2.7)
합 계	1,017 (100.0)	1,372 (100.0)	864 (100.0)

〈표 2〉 조사대상자의 연령 분포

(%)

나이 \ 국가	한 국	일 본	미 국
20 - 29세	169 (19.6)	185 (13.5)	145 (16.9)
30 - 39세	157 (15.4)	187 (13.6)	171 (19.8)
40 - 49세	237 (23.3)	292 (21.3)	167 (19.3)
50 - 59세	219 (21.5)	298 (21.7)	142 (16.4)
60 - 69세	149 (14.7)	247 (18.0)	94 (10.9)
70 - 79세	67 (6.6)	110 (8.0)	106 (12.3)
80세 이상	8 (0.8)	24 (1.7)	32 (3.7)
무 응 답	10 (1.0)	29 (2.1)	7 (0.8)
합 계	1,017 (100.0)	1,372 (100.0)	864 (100.0)

〈표 3〉 응답자의 학력분포

(%)

나이 \ 국가	한 국	일 본	미 국
중학교 졸업 이하 ¹⁾	313 (30.8)	339 (24.7)	90 (10.4)
고등학교 졸업 ²⁾	445 (43.8)	610 (44.5)	226 (26.2)
대학교 졸업 ³⁾	211 (20.7)	385 (28.1)	388 (44.9)
대학원 졸업 ⁴⁾	19 (1.9)	--	152 (17.6)
무 응 답	28 (2.8)	38 (2.8)	8 (0.9)
합 계	1,017 (100.0)	1,372 (100.0)	864 (100.0)

- 1) 일본의 경우는 小, 高小, 新中을 지칭하며, 미국의 경우는 High School 이하를 지칭한다.
- 2) 일본의 경우는 舊中, 新高를 지칭하며, 미국의 경우는 High School 졸업을 말한다
- 3) 일본의 경우는 舊高, 高專, 短大, 大學을 지칭하며, 미국의 경우는 대학중퇴도 포함한다
- 4) 일본은 대학졸업에 포함되었다.

IV. 조사결과의 분석

1. 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1) 사회복지의 주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서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한국이 23.0%로 일본의 20.0%와 미국의 22.0%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지금은 정부가 하지 않더라도 미래에는 정부의 책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때 사회복지의 주된 주체로서 정부를 들고 있는 비율은 한국이 23.0%로 일본의 45.6%와 미국의 35.0% 보다 낮았다. 그러나 이것은 설문문항자체가 상이함으로 인해 한국을 일본 미국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민간복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민간단체의 책임으로 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1%로 매우 낮았다. 그리고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 개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한국이 65.4%로 일본의 52.1%, 미국의 53.8%보다 높았다. '친척이나 가족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미국이 8.2%로 한국의 2.4%, 일본의 0.7%보다 높았다.

〈표 4〉 사회복지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항	국가	한 국	일 본	미 국
정부의 책임으로 해야한다.		23.0	20.0	22.0
지금은 정부가 하지 않더라도 미래에는 정부의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¹⁾		--	25.6	13.0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²⁾		8.1	--	--
정부의 노력과 국민 개개인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65.4	52.1	53.8
친척이나 가족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2.4	0.7	8.2
무응답		1.2	1.5	3.0
합 계		100.0	100.0	100.0

- 1) 이 문항은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에는 포함되었으나 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2) 이 문항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에는 포함되었지만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 사회복지의 대상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장애인과 장애아동이었으며 미국의 경우는 빈곤아동이였다. 사회복지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의 수준에 관해서는 현재보다 월등히 혹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한국의 경우가 51.5%로 일본의 43.2%, 미국의 46.7%보다 높았다. 여기에 조금 높은 수준까지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합하면 한국의 경우가 78.4%로 일본의 65.4%, 미국의 60.2%보다 훨씬 높았다.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 모두 빈곤한 성인에 대한 원조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표 5〉 국가나 지방시가 사회복지를 충실히 하는데 있어 다음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준 대상	현재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까지 해야 한다.			현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해야 한다.			현재보다 조금 높은 수준까지 해야 한다.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한국	일본	미국	한국	일본	미국	한국	일본	미국	한국	일본	미국
빈곤노인	22.3	19.0	34.0	30.5	29.9	17.8	33.0	23.7	14.6	3.6	11.6	15.3
장애노인	32.0	30.0	32.6	33.6	29.9	17.6	18.9	19.2	13.7	2.9	5.5	13.0
빈곤성인	7.4	2.8	19.9	15.8	9.2	10.9	34.8	16.7	12.4	17.0	32.0	17.0
장애성인	17.7	13.2	23.7	31.4	26.5	16.3	30.1	27.8	14.3	5.6	12.2	19.1
빈곤아동	20.1	13.8	40.6	32.4	28.1	14.9	27.3	26.2	12.6	5.4	13.6	12.0
장애아동	33.2	26.2	37.2	32.4	30.5	15.1	17.3	19.5	13.3	2.6	6.6	12.4
평 균	22.1	17.5	31.3	29.4	25.7	15.4	26.9	22.2	13.5	6.2	13.6	14.8

2. 사회복지와 세금인상과의 관계

사회복지와 세금인상과의 관계에 관한 문항에서는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보다 나은 사회복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국이 43.4%, 일본이 49.9%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미국은 10.3%로 매우 낮았다.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의 개선은 세금인상 없이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이 59.3%로 한국의 31%보다 매우 높았다. 물론 한국과 미국과의 차이를 평면적으로만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내어 본 경험이 한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위한 세금인상에 대해 매우 인식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인은 사회복지를 위한 세금인상에 대해 이상적인 면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6〉 사회복지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금이 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문항	국가		
	한 국	일 본	미 국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나은 사회복지가 필요하다.	43.4	49.9	10.3
사회복지개선은 필요하지만 세금은 적게 내야 한다.	18.0	47.1	25.8
사회복지의 개선은 세금인상없이 가능하다. ¹⁾	31.0	--	59.3
세금인상을 수반하는 사회복지개선은 불필요하다.	7.7	3.0	4.6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282.3$ $df = 3$ $p < .001$ (한국과 미국과의 비교에만 해당됨)

1) 이 문항은 일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3. 노인복지의식

1) 연로한 부모 부양의식

연로한 부모의 부양에 관한 응답은 한국, 일본, 미국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부모를 부양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국이 64.6%로 일본의 29.4%, 미국의 20.0%에 비해 훨씬 높았다. '내가 부양하기보다는 사회보장제도에 맡기고 나는 부차적인 도움만 제공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국은 6.7%에 지나지 않았으나 일본은 12.4%였고 미국은 무려 47.5%에 달했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변동에 의해 부모부양의식이 많이 회색되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부모 부양에 대한 전통적인 관습이나 문화가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항	국가	한국	일본	미국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부모를 부양한다.		64.6	29.4	20.0
내가 할 수 있는데 까지만 부모를 부양한다.		27.6	55.8	29.2
내가 부양하기보다는 사회보장제도에 맡기고 나는 부차적인 도움만 제공한다.		6.7	12.4	47.5
전적으로 사회보장제도나 부모의 자원에 맡긴다.		1.1	2.4	3.3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891.7 \quad df = 6 \quad p < .001$

2) 부모와 자녀의 동거에 대한 의식

한국인들은 일본인이나 미국인들보다 부모와 자녀의 동거에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노인과 자녀는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미국은 10.1%, 일본은 16.5%인데 반해 한국은 33.9%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같이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은 20.9%, 미국은 21.5%인데 반해 한국은 6.3%에 지나지 않았다.

〈표 8〉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항	국가	한국	일본	미국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노인과 자녀는 같이 살아야 한다.		33.9	16.5	10.1
거주문제가 해결되고 같이 살면서 생기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같이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59.8	62.6	68.4
부모와 자녀는 다른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6.3	20.9	21.5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260.1 \quad df = 4 \quad p < .001$

3) 노부모 부양이 어려울 경우의 부양의식

부모 부양에 있어 제공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보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이 12.8%로 일본의 24.7%보다 매우 낮았다. 그리고 '집에 모시면서 지역시설의 원조를 받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은 41.1%였고 일본은 21.0%였다.

〈표 9〉 부모 부양에 있어 귀하가 제공할 수 있는 보호 이상의 서비스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문항	국 가		
	한 국	일 본	미 국
노인복지시설 ¹⁾ 에 보내겠다.	12.8	24.7	12.3
병원에 입원시키겠다. ²⁾	39.6	38.8	--
집에 그대로 모시면서 지역시설의 원조를 받는다.	41.1	21.0	64.5
모르겠다.	6.5	15.4	23.2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156.0$ $df = 3$ $p < .001$ (한국과 일본과의 비교에만 해당됨)

- 1) 노인복지시설이란 미국의 경우 Nursing Home을 말한다.
- 2) 미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는 없었다.

4. 장애인복지에 관한 의식

'정상인과 장애인의 통합교육에 동의'하는 경우가 한국이 14.4%, 미국이 11.6%인 반면 일본은 24.6%에 달했다. 반면 '특수학교에서 완전히 분리교육을 시켜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일본이 27.4%, 미국이 27.1%이지만 한국은 55.4%에 달해 한국은 장애인과 정상인의 통합교육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표 10〉 장애인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국가			(%)
	한국	일본	미국	
정상아와 같은 학급에서 통합교육	14.4	24.6	11.6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분리교육	30.3	48.0	61.1	
특수학교에서 분리교육	55.4	27.4	27.3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298.7 \quad df = 4 \quad p < .001$

5. 공적부조제도에 대한 의식

생활보호 대상자의 정부의 생활보조금 수령의 권리의식에 대해서는 일본이 3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한국으로 29.8%, 미국이 가장 낮은 19.6%를 보이고 있다. 생활보조금 제공에 찬성하는 비율은 한국이 95.4%로 일본의 85.4%, 미국의 77.9%보다 높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제공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감퇴시키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뚜렷한 반대 태도를 표명한 비율은 일본이 14.5%, 미국이 22.0%인 반면 한국은 4.9%에 지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보아 한국인은 일본인이나 미국인보다 생활보호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11〉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생활보조금

문항	국가			(%)
	한국	일본	미국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제공은 국민의 권리로서 당연하다.	29.8	39.9	19.6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제공은 국민의 권리는 아니나 제공하여야 한다.	65.3	45.5	58.3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제공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감퇴시키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4.9	14.5	22.0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210.9 \quad df = 4 \quad p < .001$

* 미국에서의 생활보호제도는 일반부조 (General Assistance), AFDC, 또는 Medicaid를 말한다.

6. 자원봉사의식

1) 자원봉사의 경험

자원봉사의 경험에 있어서는 현재하고 있는 비율은 한국이 32.1%로 일본의 13.9%와 미국의 16.9%에 비해 높았으나, 과거의 경험유무비율은 미국이 48.6%로 한국의 22.4%와 일본의 12.9%보다 높았다. 현재와 과거를 포함한 자원봉사의 경험은 미국이 65.5%로 한국의 54.4%, 일본의 26.8%보다 매우 높다. 이로 미루어 보아 자원봉사는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자원봉사의 개념과 범위, 내용 등에서 세 국가의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에는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표 12〉 자신의 본래 일과는 별도로 지역이나 사회를 위하여 시간이나 노력, 기술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있습니까?

(%)

문 항	국 가		
	한 국	일 본	미 국
현재하고 있다.	32.1	13.9	16.9
현재는 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한 적이 있다.	22.4	12.9	48.6
현재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도 한 적이 없다.	45.5	73.2	34.5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528.5 \quad df = 4 \quad p < .001$$

2) 자원봉사활동의 빈도

자원봉사활동의 빈도로는 한 달에 1번 정도가 한국과 일본 모두 각각 26.7%와 32.2%로 가장 많았다. 거의 매일 하고 있는 사람은 한국의 경우는 13.0%, 일본은 8.7% 정도였다. 자원봉사의 빈도비율은 한국과 일본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13〉 자원봉사활동은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문항	국가		(%)
	한국	일본	
거의 매일 하고 있다.	13.0	8.7	
일주일에 2-3일 정도하고 있다.	15.2	12.8	
일주일에 1일 정도하고 있다.	18.1	15.4	
한 달에 2-3일 정도하고 있다.	21.9	20.8	
한 달에 1일 정도하고 있다.	26.9	32.2	
기 타	5.1	10.1	
합 계	100.0	100.0	

$\chi^2 = 7.2 \quad df = 5 \quad p > .05$

3) 자원봉사 재개의사

자원봉사의 재개의사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간에는 차이가 난다. 자원봉사 재개 의사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는 88.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한국보다 적은 68.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한국은 한 명도 없었으나 일본의 경우는 응답자의 1.9%였다.

〈표 14〉 자원봉사활동을 다시 하고 싶으십니까?
(과거에 경험 있는 사람을 대상)

문항	국가		(%)
	한국	일본	
꼭 다시 하고 싶다.	15.6	13.0	
가능하면 하고 싶다.	72.4	55.6	
그다지 하고 싶지 않다.	9.8	11.5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	1.9	
모르겠다	2.2	18.0	
합 계	100.0	100.0	

$\chi^2 = 80.2 \quad df = 5 \quad p < .001$

4) 경험 없는 사람에 대한 자원봉사 참여의사

과거에 자원봉사의 경험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관심도는 한국과 일본간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다. '꼭 하고 싶다'라고 답한 사람이 한국의 경우는 15.2%였으나 일본의 경우는 1.6%에 지나지 않으며, '가능하면 하고 싶다'는 사람도 한국은 64.6%에 달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36.1%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응답자의 11.1%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답한 반면에 한국은 0.9%에 지나지 않았다.

〈표 15〉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으십니까?
(과거에 경험 없는 사람을 대상)

문항	국가	
	한국	일본
꼭 하고 싶다	15.2	1.6
가능하면 하고 싶다	64.8	36.1
그다지 하고 싶지 않다	11.7	20.8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9	11.1
모르겠다	7.4	30.4
합 계	100.0	100.0

(%)

$\chi^2 = 265.1 \quad df = 4 \quad p < .001$

5) 자원봉사활동의 보수에 대한 의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수에 대한 의식도 韓日간에 차이가 많이 난다. 한국은 '사례나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답한 사람이 57.5%에 달했으나 일본은 24.7%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에 '교통비 정도의 실비 정도는 받아도 된다'라고 답한 사람이 한국은 33.5%였으나 일본의 경우는 54.1%에 달했다. 또한 '실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국은 4.3%였으나 일본의 경우는 9.6%에 달했다.

〈표 16〉 자원봉사활동의 보수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국가		일본 (%)
	한국	일본 (%)	
사례나 보수는 받아서는 안된다.	57.5	24.7	
교통비 정도의 실비 정도는 받아도 된다.	33.5	54.1	
실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4.3	9.6	
기타	1.8	2.0	
모르겠다.	2.8	9.7	
합 계	100.0	100.0	

$\chi^2 = 260.3$ $df = 4$ $p < .001$

6)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역할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하여야 할 역할은 한국은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홍보,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경제적 원조, 연수회나 강습회의 개최 등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으며, 일본의 경우는 연수회나 강습회의 개최, 경제적 원조, 홍보나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활동 중의 사고에 대한 보험제도의 정비 등을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표 17〉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지원분야는 무엇이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문항	국가		일본 (%)
	한국	일본 (%)	
활동을 위한 홍보,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9.3	48.8	
복지자금 등의 경제적 원조	47.6	50.0	
기술이나 지식 등의 연수회, 강습회 개최	45.8	50.7	
활동에 필요한 자재 등의 제공	37.2	37.3	
복지에 관한 교육에 치중	35.8	34.3	
활동 중의 사고에 대한 보험제도의 정비원조	31.2	48.0	
자원봉사집회나 기재보관의 장으로서 지역거점활동의 정비	21.0	37.3	
활동가와 받아들이는 자와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20.6	28.9	
모르겠다.	3.0	10.0	
기타	2.1	1.5	
무응답	-	1.1	
합 계	100.0	100.0	

7. 수양부모에 대한 인식

수양부모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일본인이나 미국인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수양부모가 꼭 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국이 5.4%로 한국의 2.9%, 일본의 1.6%보다 약간 높았으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율은 한국이 53.9%로 미국의 36.3%, 일본의 26.5%보다 높았다. 유보적인 응답인 '모르겠다'라고 답한 비율은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매우 낮았다.

〈표 18〉 부모가 없거나 이혼 등에 의해 친부모가 키우기 불가능한 아동을 맡아서 일정 기간 자택에서 맡아 기르는 사람을 수양부모라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이와 같은 수양부모 역할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

문항	국 가		
	한 국	일 본	미 국
꼭 하고 싶다.	2.9	1.6	5.4
가능하면 하고 싶다.	51.0	24.9	30.9
그다지 하고 싶지 않다.	30.8	27.1	23.2
전혀 하고 싶지 않다.	7.8	18.0	12.1
모르겠다.	7.5	28.4	28.4
합 계	100.0	100.0	100.0

$$\chi^2 = 332.8 \quad df = 8 \quad p < .001$$

V. 조사결과의 분석에 대한 논의

1. 한국, 일본, 미국의 복지인식의 비교

본 조사에 근거하여 한국, 일본, 미국의 복지인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사회복지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근거로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세금인상이 없는 사회복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은 빈민의 복지수혜권리에 대한 인식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근로의욕을 감퇴시킨다는 이유로 빈민에 대한 생활 보조금제공에 반대하는 비율이 한국은 4.9%, 일본은 14.5%에 지나지 않으나 미국은 무려 22.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낮은 복지인식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전통적

인 개인주의 정신과 자유주의사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부양의식이나 부모와 자녀의 동거의식은 단연 한국이 제일 높았으며, 다음은 일본이었고 미국은 제일 낮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부모부양과 가족운리를 강조하는 한국의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높은 부모부양의식과 부모와 자녀와 동거의식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보다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에 돌입하고 있는 1990년대 중반에 조사된 한국의 높은 부모부양의식과 동거의식은 한국의 가족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장애인의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장애인복지의 최근 추세는 장애인을 정상인과 분리하여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교육시키는 정상화와 통합교육이다. 일본이나 미국은 약 27%의 사람들만이 특수학교에서의 분리교육에 찬성하고 있으나 한국은 무려 55%의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의 통합교육이 반드시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정상인과 구별하여 교육시키려는 의식은 전통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분리시키려는 한국인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한국은 일본과 미국보다 빈민에 대한 정부보조금 제공에 대해 보다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빈민의 생활보조금 수혜의 권리성에 대한 찬성 비율은 일본보다 조금 떨어지는 편이나 빈민에 정부의 생활보조금 제공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은 일본의 85%, 미국의 78%보다 높은 95%에 달했으며, 뚜렷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사람은 일본의 14.5%, 미국의 22%보다 매우 적은 4.7%에 지나지 않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자원봉사정신이 강한 순서는 미국, 한국, 일본 순이었다. 한국의 자원봉사정신이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온 미국과 거의 대등하고 일본보다는 훨씬 높은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최근에 와서 한국에서 자원봉사가 범사회적으로 강조되면서 자원봉사의식이 고조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자원봉사의 경험에 있어서 현재 하고 있는 비율은 한국이 33%로 일본의 14%나 미국의 17%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빈도도 일본보다 높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회복지분야에 자원봉사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자원봉사정신을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관한 개념정리, 자원봉사인력의 관리, 전문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인력과의 업무경계 확립 등과 같은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복지정책방향 설정에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한국과 비교의 대상이 된 일본과 미국은 사회복지 면에서 볼 때 선진국이 아니다. 미국은 사회사업방법론은 일찍 발달했지만 전통적인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사상으로 인하여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이 느리고 범위도 제한적이다. 일본도 기업복지와 같은 민간복지는 잘되어 있으나 정부가 주체가 되는 복지는 별로 발달되어 있지 못한 편이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성장과 산업화 수준은 사회복지발전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 즉 산업화 논리 (logic of industrialization)를 무력하게 만드는 두 중요한 국가이다. 그러므로 만일 한국의 복지의식을 유럽의 국가들의 그것과 비교하였다면 본 연구의 결과보다 더 차이가 났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 일본, 미국의 복지의식의 비교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방향에 미치는 시사점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의 국가책임성의 강화 필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사회복지의 주체가 민간단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주체가 되든지 아니면 정부와 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사회복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3%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와 개개인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65%에 달했다. 반면에 민간단체가 사회복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8.1%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복지의 주체는 정부, 민간단체, 가족 중 어느 하나만이 되는 것이 아닌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정부는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복지보다는 민간차원의 복지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1995년 3월에 발표된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5가지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대통령 복지구상은 명시적인 기본원칙은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정부책임보다는 개인이나 민간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저수준보장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는 다만 사회복지제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만 책임질 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개인책임이나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적 복지의 원칙'에서는 정부의 활동보다는 민간부문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의 사회복지팽창의 부작용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신보수주의가 1980년대 들어 세력을 더해가면서 민영화와 민간복지를 선호한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가입하려고 추진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복지비지출이 13% 정도인데 비하여 한국은 1% 정도의 수준으로, 제대로 복지를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

서 복지의 부작용을 운운한다거나 민간복지를 강조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사회복지의 주체가 정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규범적이고 가치적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 효율성 때문이다. 즉 전자는 사회복지가 평등, 소득 재분배, 인간의 존엄성, 사회구성원의 유대 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다른 방법(시장이나 가족)에 의한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⁷⁾

2) 가족통합을 위한 가족정책수립

사회복지의 최종목적은 사회통합이다. 그러나 사회통합은 먼저 가족통합이 되어야 가능하다. 가족통합이 전제되지 않은 사회통합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최근의 세계적인 경향이 탈시설화와 재가보호이다. 한국은 사회복지를 통한 가족통합을 이루기에는 매우 적합한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다. 본 조사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인의 노인부양 의식이나 부모와 자녀의 동거의식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월등히 높다. 그러므로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과 자녀가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노인복지정책은 가족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건설 붐을 일으키고 있는 실버타운이다. 실버타운건설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가족을 통합시키기보다는 해체시키는 것이다. 외딴 곳에 많은 돈을 들여 호화 시설의 실버타운을 짓는 것보다는 같은 집에 동거하지는 않을지라도 가까운 지역 내에서 같이 살 수 있는 형태의 노인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족과 분리된 노인 홈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이 산업화됨으로 인해 이미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젊은 계층이 노인과 동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으며¹⁸⁾, 본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30대 세대의 노인과 자녀의 동거선호도는 40대 이후 세대의 그것보다 오히려 높다. <표 19>에서 보는바와 같이 20대와 30대의 경우 '노인과 자녀간의 동거가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9.7%로 오히려 40-50대의 47.3%, 50-60대의 38.2%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별개의 洞이나 區에 사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4.3%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 비율은 40대 이후의 사람들이 답한 비율보다 오히려 낮다. 그러므로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노인과 동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17) 김태성, 성경룡 공저,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 1993, p198. 여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pp.199-213을 참조하기 바람.

18) 박광준, "일본의 아동복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日韓사회복지학술심포지움 토론요지, 1995년 2월 14-5일, 일본사회사업대학. P.16.

다르며 오히려 50대 이상의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보다 동거찬성 비율이 적다.

물론 이러한 조사결과는 엄격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이 가족통합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현재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최근 맞벌이 젊은 세대들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시부모와의 동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의 가족통합에의 높은 욕구는 가족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표 19〉 연령별 노인과 자녀의 동거형태 (한국)

문항	나이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동거가 좋다	49.7	47.3	38.2
같은 부지 내에서 별개의 주택이 좋다.	25.9	23.9	20.5
바로 근처에 사는 것이 좋다.	12.3	14.8	25.0
동일한 洞 혹은 區에 사는 것이 좋다.	4.3	6.9	10.0
별개의 洞 혹은 區에 사는 것이 좋다.	4.3	5.1	6.4
모르겠다.	3.4	2.0	--
합 계	100.0	100.0	100.0

$X^2=34.56$ D.F = 10 $p < .001$

3)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정리와 전문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인력의 업무경계확정

최근에 와서 한국에서는 모든 영역에 있어 자원봉사가 '만병통치약'로 여겨지는 것 같다. 기업체에서는 승진에 자원봉사경력을 고려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입학사정에 자원봉사의 경험을 가산하겠다고 하는 대학교가 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자원봉사가 강조되어 정부는 공공의 전문인력보다는 자원봉사인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에서도 하나의 개별과목으로 개설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원봉사가 강조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만의 지나친 강조는 사회복지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자원봉사만으로는 사회복지의 당면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자원봉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¹⁹⁾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는 전문

19) 자원봉사를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미국은 아직도 사회복지후진국 (welfare laggard) 혹은 불완전한 복지국가 (incomplete welfare state)로 불리고 있다. 여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언급은 Roy Lubove, The Struggle for Social Security 1900-1935, Pittsburgh:

사회복지사가 해야 하는 업무가 있고 자원봉사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의 차별성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자원봉사활동 강조는 자칫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원봉사를 강조하기 이전에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의 자원봉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해 둘 필요성이 있다. 즉 업무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인력의 업무활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후 본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한국인들의 높은 자원봉사열을 이용한다면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본 조사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들로 홍보활동과 정보제공, 재정적 지원, 강습회 개최 등이 우선순위에 해당된다. 또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양성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중요시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중요시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 중의 사고에 대한 보험제도이다. 일본의 경우는 보험제도정비를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 일들 중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수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한국인 과반수 이상의 사람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수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냈지만 31.3%의 사람이 실비정도수령에 찬성의견을, 4%는 실비수령의 당연성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거의 60%의 사람이 보수제공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도 자원봉사에 대한 보수에 대해 원칙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VI. 맺으면서

본 연구는 한국과 비슷한 문화와 경제성장배경을 지닌 일본의 복지의식과 전혀 이질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미국의 복지의식을 한국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들은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뒤지지 않기 때문에 복지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본다. 그 이유는 복지의식을 측정하는데 있어 대표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빈민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이 일본인이나 미국인보다 다소 진보적이며, 민간복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최근에 와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을 중요시여기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가족복지가 충실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복지총합을 정부에

서 실시하는 공공복지, 민간차원에서 실시하는 민간복지, 그리고 가정에서 제공되는 가족 복지를 모두 합한 것이라고 할 때, 한국은 민간복지와 가족복지의 총합은 커질 수 있어 복지의 총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복지이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복지의 양과 질은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본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인들은 상당수가 복지의 주체로 정부를 택하고 있으며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보다 나은 복지를 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빈민에 대한 정부보조금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한국인들 사이에는 '사회복지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복지를 최대한 늘려야 하며 그렇게 되면 한국의 사회복지 총합은 극대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국가간 비교연구가 원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간 비교연구 경험이 없는 한국의 실정에서는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도 도출되도록 설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국가간의 조사논문이 한국의 사회복지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이 조사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비교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가면서 양질의 국가간 비교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